

조선후기 역사상의 형성과정과 역사교육 : 주요학설의 변화와 수용

김 백 철*

I. 머리말
II. 학계의 식민사학 극복노력
1. 왕정의 재평가 논리
2. 조선후기 역사상의 체계화
III. 교육과정의 연구성과 도입
1. 사회변동론의 채택
2. 봉당·탕평의 길항
3. 대동·균역의 인식
IV. 맺음말

국문초록

학계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망해가던 왕조라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서 사상사(실학), 사회경제사(자본주의맹아론), 정치사(봉당·탕평), 경제사(대동·균역), 문화사(진경문화) 등을 통해서 내재적 발전론을 구성하였다. 교과서는 점차 긍정적인 조선후기 역사상을 채택해나갔다.

2-7차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979년 사회변동론 시각이 공식적으로 표방되면서 자본주의맹아론이 수록되었고 1990년 사회변동론이 강화되면

* 계명대학교 인문국제학대학 사학과 부교수 / sugaine@kmu.ac.kr

서 민중사관과 봉당정치론이 채택되었으며 1996년 민중사관이 짚어지고 2002년 정조의 개혁정치, 과학기술의 연구성과, 진경문화론 등도 들어가면서 증립적 입장으로 방향을 수정해 갔다. 이러한 조선후기 역사상은 2000년대 검정체제 회복 후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주요 대본처럼 활용되었다.

교과서의 편찬이 학계의 연구 성과뿐 아니라 정권교체와도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외형상 잦은 검정교과서 개편뿐 아니라 내용상 신·구학설의 동거현상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이는 그동안 교육과정 설계에서 연구사 분석에 미처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교육공학적 입장에서 지식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학습방법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수록될 내용 자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역사교육의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상시적으로 교과교육에 들어가는 학설을 분석하는 기구나 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 주제어

조선시대상, 역사교육, 자본주의맹아론, 봉당정치론, 탕평정치론, 대동법, 균역법

I. 머리말

조선 후기 역사상은 광복 이후 비로소 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스스로 역사교육의 주체가 됨으로써 한국통사 및 역사교재의 편찬에 온 힘을 경주하였다.¹⁾ 그러나 국망의 현실 하에서 식민지를 경험했기에 전통시대 인식은 비판정신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지식인들의 자성의 목소리는 일제의 식민지교육에 악용되기도 했다.²⁾ 아직 제대로 된 식민주의 역사학에 대한 분석·검토를 거칠 겨를도 없이 해방공간에서 역사교육은 진행되었다. 점차 교재를 개선하였으나 역사의식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었다. 한번 식민교육을 받아온 세대가 다시 후속세대 교육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학계의 변화 속도는 대중의 인식변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학계 연구의 양적·질적 성장이 두드러졌음에도 1990년대 교과서에 이르러 비로소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역사상을 구축했다.³⁾ 오늘날 세대간 역사인식의 격차는 바로 각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
- 1) 광복이후-1980년대 주요 통사류는 다음참조. 京城大學朝鮮史研究會(손진태 편), 『조선사개설』(홍문서관, 1949); 이병도, 『조선사대관』(동지사, 1948); 이병도, 『국사대관』(동지사, 1950); 손진태, 『국사대요』(을유문화사, 1955); 이기백, 『국사신론』(태성사, 1961); 진단학회(이상백 편), 『한국사: 근세전기편』(을유문화사, 1961); 진단학회(이상백 편), 『한국사: 근세후기편』(을유문화사, 1965); 이기백, 『한국사신론』(일조각, 1967); 한우근, 『한국통사』(을유문화사, 197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1~24(국사편찬위원회, 1978); 변태섭, 『한국사통론』(삼영사, 1986).
- 2) 조선시대 역사상 형성은 다음참조. 정다함, 「“한국사”상의 조선시대상: 조선전기를 중심으로」, 『사이(SAI)』8, 2010, 9~53쪽; 강상규, 「근대 지식체계와 조선사 이미지」, 『동양정치사상사』9-2, 2010, 5~26쪽; 김백철, 「조선시대 역사상과 공시성의 재검토: 14-18세기 한국사 발전모델의 모색」, 『한국사상사상학』44, 2013, 273-317쪽; 김백철, 「17-18세기 대동·균역의 위상: 조선시대 재정개혁 모델의 모색」, 『국학연구』28, 2015, 41-81쪽; 오항녕, 『조선의 힘』(역사비평사, 2016); 김백철, 「오래된 미래교과서: 안화의 『조선문명사』」, 『동아시아고대』50, 2018, 194~221쪽; 김백철, 『왕정의 조건: 담론으로 읽는 조선시대사』(이학사, 2021); 김백철, 『세계사에서 역사교육의 방향모색: 한국사이론모델의 구축과 활용』(그물, 2024); 김백철, 「조선시대 왕정상과 역사교육의 방법론 모색: ‘국민국가’·‘민국’개념의 재검토」, 『한국학논집』97, 2024, 175~234쪽.
- 3) 교과서 역사상은 다음참조. 우인수,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분석」,

에 따라 발생하고 있다.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국사교과서의 역사상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했지만 단발성 비판만 넘쳐났을 뿐 대안모델 제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사회과통합론자의 역사교육선택론, 뉴라이트사관의 식민지근대화론, 검인정 체제 하 자유방임주의 역사서술 등은 종래 교과서에서 담은 학계 연구 성과조차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광복이후 학계에서 노력해 온 식민사학 극복 노력은 모순적이게도 선진체도로 믿어 의심치 않던 검정 체계하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검정제도 역시 정권교체기마다 격변을 겪었다. 2010년에는 검정까지 완료된 고등학교 『역사』가 갑자기 『한국사』로 바뀌었고, 2011년에는 중학교 『역사(하)』를 검정하자마자 2012년 『역사1·2』를 재검정하였다. 특히 2013년 뉴라이트교과서, 2015년 국정교과서 등을 통해 검정제도 역시 위협을 받았다가 2019년 간신히 복귀하였다.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검정체도가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적 교육모델 마련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학계 인식과 교육과정을 점검해 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먼저 학계의 식민사학 극복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왕정의 재평가논리와 조선후기 역사상의 체계화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다음으로 광복이후 교육과정에서 해당 연구 성과의 도입경과를 검토해보려고 한다.⁴⁾ 특히 교과서체계의

『역사교육』84, 2002, 1~38쪽; 차미희, 「7차교육과정 중학교 국사교육의 내용구성」, 『한국사학보』19, 2005, 187~214쪽; 차미희, 「3차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국사과의 독립배경과 국사교육내용의 특성」, 『한국사학보』25, 2006, 391~432쪽; 박평식, 「국사교육에서 조선시대사의 편제와 내용구성」, 『역사교육』123, 2012, 31~67쪽; 박평식, 「조선시대사 연구의 성과와 역사교육」, 『역사교육』125, 2013, 337~360쪽; 신유아, 「교과서 내용서술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조선 전·후기 서술을 사례로」, 『역사교육』147, 2018, 89~120쪽; 오향녕, 「2020년 간행(2018년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조선사 서술 검토」, 『한국사학보』80, 2020, 117~149쪽; 신유아, 「제5차교육과정 ‘국사’의 내용편제와 서술방향: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33, 2021, 81~113쪽; 신유아, 『프레임에 갇힌 역사, 프레임을 깨는 역사』(혜안, 2021).

4) 1-7차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살피되 2000년대이후 검정체제는 고등학교 교과서가 전통시대 서술분량의 급격한 변동이 잦았으므로 중학교 교과서에 초점을 맞추되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완하는 형태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큰 변동을 일으킨 사회변동론과 정치·경제사의 서술변화에 초점을 맞추어볼 것이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토대로 향후 학계에서 보다 진전된 논의를 통해 역사교육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II. 학계의 식민사학 극복노력

1. 왕정의 재평가 논리

일제강점기에는 망국의 현실에 직면하였기에 조선시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광복이후에도 한번에 바꿀 수 없었고 점진적 노력 끝에 현재 조선시대 역사상이 만들어졌다. 조선시대 이론들은 다음 몇 가지 학설이 대표적이다.

첫째, 왕정비하의식 개선이다. 일제가 대한황실을 천황가에 복속시켜 ‘李王職’으로 격하하면서 ‘李氏朝鮮’ 혹은 ‘李朝’를 사용했는데 광복이후 강제병합상태를 나타내는 용어가 별다른 비판 없이 일정 기간 혼용되었다.⁵⁾ ‘이조’의 직역인 ‘Yi Dynasty’의 표기는 일제뿐 아니라 광복후 한국 개설서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⁶⁾ 1960년 실록의 영인이 이루어지자, 그 명칭을 일제가 붙인 ‘이조실록’에서 ‘조선왕조실록’으로 대체하면서⁷⁾ 학계를 중심으로 식민사관 극복차원에 ‘조선’으로 개칭하는 운동도 급진

5) 김백철, 『한국사강의』(개정판, 퍼플, 2024), 230~231쪽.

6) 한우근의 『한국통사』(을유문화사, 1970) 및 이기백의 『국사신문』(태성사, 1961)은 각각 The History of Korea(The Eul-yoo Publishing Company, 1972)와 A New History of Korea (Harvard-Yenching Institute, 1984) 등으로 영역되었는데 이때 ‘Yi Dynasty’로 표기되었다. 향후 양자의 개정판에는 ‘李朝’가 모두 ‘朝鮮王朝’로 바뀌었던데 비해서 영문만은 여전히 ‘Yi Dynasty’로 표기되었는데, 최초 한국어본에서 ‘이조’로 표기했기에 국내대본을 번역하여 생긴 문제였다. 이는 대한제국기까지 ‘Corea’, ‘Korea’, ‘Chosun’ 등이 사용된 것과 구분된다.

7) 신석호, 「조선왕조실록 영인과 그 보관, 문화재의 중요성을 위하여(상)」, 『동아일보』, 1960.12.07.

전되어 점차 논문을 비롯한 개설서에도 반영되었다.⁸⁾

둘째, 실학담론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탐구는 광무연간 정약용이나 유형원을 비롯한 경제학자들의 문헌이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면서 고종 후반 정부시책에 활용되었고,⁹⁾ 고전읽기 운동 역시 1910년대 조선광문회부터 출판사업을 통해서 시작되었으나 본격적 움직임은 1930년대 조선학운동으로 일정한 성과를 이루었다.¹⁰⁾ 구체적 계기는 정약용의 『與猶堂全書』 활자본 보급을 계기로 실학연구가 본격화되었다.¹¹⁾ 이때 조선 정부는 무능하여 망국에 이르렀으나 재야의 선각자들은 근대사회를

8) <표 1> 李朝와 朝鮮 표기의 변화

李朝	朝鮮
이상백, 『李朝건국의 연구』(을유문화사, 1947), 3~9쪽; 손진태, 『이씨조선시대(근세사) 및 현대사』, 『국사대요』(을유문화사, 1949), 185~186쪽; 경성대학교조선사연구회(손진태 편), 『이씨왕조의 확립』, 『조선사개설』(홍문서관, 1949), 341쪽; 박봉섭, 『근세사(이조)』, 『조선사경해』(은문사, 1949), 181쪽; 이병도, 『이씨조선의 개창』, 『이씨조선의 제2기』, 『이씨조선의 종말』, 『국사개설』(동사본, 국민사상연구원, 1950), 65~101쪽; 이인영, 『이씨왕조 건국의 기반』, 『국사요론』(민족사, 1958), 108~113쪽; 한우근 외, 『이씨왕조』, 『국사신강』(일조각, 1958), 208~315쪽; 이병도, 『이씨왕국의 확립과 문화』, 『신수국사대관』(보문각, 1960), 324~373쪽; “이씨의 왕조” 이상백, 『이태조의 신왕조 개창』, 『한국사: 근세전기편』(을유문화사, 1962), 69쪽; “이씨왕조” 이기백, 『조선왕조』, 『국사신론』(제일출판사, 1963), 197쪽; 박형표, 『이씨조선건국』, 『이조상쟁의 역사』, 『이조당쟁』, 『국사통론』(동명사, 1965), 468~478쪽, 496~522쪽, 532~534쪽; “이씨왕조” 한우근, 『양반관료국가의 성립과 왕권의 확립』, 『한국통사』(을유문화사, 1970), 217쪽.	조좌호, 『조선왕조의 성립과 왕권의 확립』, 『한국사통론』(박영사, 1975), 186~191쪽; 이준희, 『조선왕조의 성립』, 『한국사개설』(명지대출판부, 1977), 126~129쪽; 변태섭, 『조선왕조의 성립과 민족국가의 발달』, 『한국사요론』(개정판, 삼영사, 1977), 332~337쪽; 이화여대 한국문화사 편찬위원회 편, 『조선 전기의 문화』, 『한국문화사』(이화여대출판부, 1978), 164~170쪽; 이태진, 『집권관료체제와 양반』, 『한국사연구논문』(지식산업사, 1981), 262~271쪽; 한우근·이태진 편저, 『조선왕조의 개창과 양반관료제의 확립』,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조선전기편』(일지사, 1984), 9~68쪽; 변태섭, 『조선의 건국과 집권화 정책』, 『한국사통론』(삼영사, 1986), 255쪽; 한우근, 『양반관료국가의 성립과 왕권의 확립』, 『한국통사』(개정판, 을유문화사, 1987), 207~211쪽; 한국역사연구회 편, 『조선의 성리학과 농민』, 『한국사강의』(한울아카데미, 1989), 150~169쪽; 이기백, 『조선왕조의 성립』, 『한국사신론』(신수관, 일조각, 1990), 224쪽; 한영우, 『조선건국과 사대부』, 『한국사특강』(서울대출판부, 1990), 119~135쪽;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의 건국』, 『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120~121쪽; 허형강, 『조선왕조의 성립』, 『한국의 역사』(신구문화사, 1992), 188~192쪽; 국사교재편찬위원회, 『집권적 관료국가의 성립』, 『한국사의 이해』(부산대출판부, 1993), 168~172쪽; 배용일, 『조선왕조의 성격』, 『한국사개론』(대왕사, 1993), 136~137쪽; 한영우, 『조선왕조의 성립』,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1997), 219~223쪽.

9) 김백철, 『『경세유표』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 58, 2021, 134~138쪽, 152~159쪽.

10) 전운선, 「1930년대 ‘조선학’ 진흥운동 연구: 방법론의 모색과 민족문제 인식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학과 석사논문, 1998, 5~13쪽; 채관식, 「1930년대 ‘조선학’의 심화와 전통의 재발견」, 연세대 사학과 석사논문, 2006, 4~10쪽; 배연숙, 「위당 정인보의 조선학 성립배경에 관한 연구」, 『철학논총』 59, 2010, 406~414쪽; 신주백, 「‘조선학운동’에 관한 연구동향과 새로운 시론적 탐색」,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7, 2011, 188~190쪽.

11) 천관우, 「조선 후기 실학의 개념」, 『조선 후기 실학의 개념 재론』, 『한국사의 재발견』(일조각, 1974), 96~106쪽, 107~139쪽.

예비하고 있었다는 논리가 제창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실제로는 광복이후 적극적으로 확산되었다.¹²⁾ 그 변화의 배경에는 ‘새로운 문화의 기운’이 주로 외부의 영향으로 일어났다는 설명이 지배적이었다. 실제로 청대 고증학의 영향이 실학사상에서 강조되었고 서양 과학기술이나 천주교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졌다.¹³⁾ 이는 조선후기대상을 긍정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만선사관·타를성론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셋째, 내재적 발전론이다. 일본제국은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 300여년간 이상 망해간 왕조라는 주장을 펼쳤다. 여기에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되었다.¹⁴⁾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마르크스주의가 유행하였고 광복이후 국내에서는 사회구성체론의 형태로 제한적으로 흡수되었다. 경제 재건에 나서면서 1960-70년대 자본주의맹아론(廣作/상품재배/화폐유통/場市/농·상·공·광업발달)이 먼저 제창되었고 그에 따른 조선후기 사회변동논쟁도 장기간 지속되었다.¹⁵⁾ 사상사분야의 실학담론을 경제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켜서 사회경제적 흐름이 근대를 지향했다는 논리가 대두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 주도의 세계개혁에 대해서는 1960년대 이후 17세기 대동법과 1990년대 이후 18세기 균역법 연구가 본래도에 올랐음에도¹⁶⁾ 19세기 삼정문란을 소급해서 비판하는 방식이 좀처럼 개선되지

12) 천관우, 「반계 유행원 연구(상)」, 『역사학보』2, 1953, 170~171쪽.

13) 천관우, 「조선후기 실학의 개념 재론」, 같은 책(1974), 112~113쪽; 박평식, 앞의 논문(2013), 343쪽.

14) ①정부조치를 긍정하면서 변화가 발전적 방향이었다는 주장이다(김용섭,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신분제의 동요와 농지점유: 상주양안연구의 일단」, 『사학연구』15, 1963, 1~49쪽). ②신분변화 자체가 의심스럽다는 반론이다(최승희, 「조선후기 향리신분변동연구: 향리가문 고문서에 의한 사례연구」, 『김철준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지식산업사, 1983, 487~524쪽). ③중세사회가 무너지고 근대사회로 변화하는 해체기로 보는 시각이다(근대사연구회, 『한국중세사회해체기의 제문제』상·하(한울, 1987); 정석중 외, 『한국사9·10: 중세사회의 해체1·2』(한길사, 1994)).

15) 이태진,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변화: 양반사회변화론의 연구성과 한계」, 『한국사회발전사론』(일조각, 1992), 129~226쪽.

16) 【대동】한영국, 「호서에 실시된 대동법(상·하)」, 『역사학보』13·14, 1960~1961, 상 77~107쪽, 하 77~132쪽; 한영국, 「대동법의 실시」, 『한국사』13(국사편찬위원회,

못했다.¹⁷⁾ 대개 조선은 구체제(봉건사회)로 설정되었으므로 都結도입이 후 항소운동과정에서 등장한 문제까지 조선후기 전체로 소급비판하는 것이 자연스런 이해방식이었다. 그러나 개혁 직후 민의 지지를 받아서 100여년이상 정상 작동되었다면 성공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오늘날 정책은 10여년도 유지되기 힘든데 유독 왕정에만 수백년간 책임을 묻고 있다.¹⁸⁾

넷째, 민중사관이다. 사회구성체론은 1970년대 민족주의를 경험한 뒤 1980년대에 이르면 民族-民衆을 결합한 민중운동을 보급하는데 기여하였다. 초기 식민사학 극복논리에서 反帝의 핵심을 민족으로 설정했다면, 이제 半封建으로 테제를 재설정하면서 역사의 주체를 피지배층인 ‘민중’으로 제시하였다.¹⁹⁾ 혁명사관의 출현은 조선시대를 일종의 구체제에 해당하는 ‘봉건사회’나 ‘중세해체기’로 전제하고 자력근대화 의 꿈을 일구는데 민중의 역할이 주요했다고 보았다. 실학 및 자본주의 맹아론의 제 요소를 이러한 관점에서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다.²⁰⁾ 다만 17세기 봉당론과 18세기 탕평론이 지지를 받으면서 조선후기 전체에 투영되던 구체제론은 19세기로 점차 범위가 축소되었다.

다섯째, 봉당정치론이다. 한말 유행한 黨論書에서 조선시대를 政爭의 역사로 그리는 방식도 쉽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심지어 『黨議通略』은 조

1976), 152~153쪽; 한영국, 「대동법의 시행」, 『(신편)한국사』30(국사편찬위원회, 1998), 493~511쪽;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역사비평사, 2012); 【균역】 정연식, 『조선후기 ‘役總’의 운영과 양역변동』,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3; 최주희, 『조선후기 선혜청의 운영과 중앙재정구조의 변화: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한국사학과 박사논문, 2014.

17) 차문섭,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상·하)」, 『사학연구』10:11, 1961, 하144쪽; 차문섭, 「균역법의 실시」, 『한국사』13(국사편찬위원회, 1976), 260~276쪽; 최완기, 「대동법실시의 영향」, 『국사관논총』12, 1990, 208쪽; 최완기, 「봉당정치의 전개와 정국의 변화」, 『한국사』9(한길사, 1994), 144~145쪽.

18) 안확은 『조선문명사』에서 19세기는 “官吏의 惡化와 民志의 墮落”이라고 지적하며 양자책임으로 보았다. 김백철, 앞의 논문(2018), 220쪽.

19) 한국민중사연구회, 『한국민중사』1:2(풀빛, 1986).

20) 근대사연구회, 앞의 책(1987); 정석중 외, 앞의 책(1994).

선광문화 보급도서이기도 했다.²¹⁾ 오히려 당론서의 역사상은 식민사학자들에게서 당파성론(당쟁사관)으로 체계화되었다.²²⁾ 일제강점기 안확이시어는 이미 봉당을 긍정하였으나,²³⁾ 광복 직후 통사류는 실학담론을 적극 채택했음에도 망국의 원흉으로 지목된 당쟁사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였다.²⁴⁾ 1970년대부터 양반문화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1980년대 당파성론 비판이 본래도에 오르고서야²⁵⁾ 비로소 봉당정치론도 확산되었다.²⁶⁾

21)李建昌, 『黨議通略』(朝鮮光文會, 1912).

22)林泰輔, 『朝鮮近世史』(東京: 吉川半七, 1901); 幣原坦, 『韓國政爭志』(東京: 三省堂書店, 1907); 長野虎太郎細井肇, 『朋黨土禍の檢討』(自由討究社, 1921); 旗田巍, 「土禍と朋黨」, 『朝鮮史』(東京: 岩波書店, 1951), pp.125~135.

23)安廓, 『朝鮮文明史』(匯東書館, 1923); 石井壽夫, 「李朝後期史について一考察: 後期李朝理學至上主義國家社會の消長よりみたる(一)(二)(完)」, 『社會經濟史學』 10-6-7, 經濟史學會, 1940.

24)경성대학조선사연구회(손진태 편), 「사화와 당쟁」·「당쟁의 치열」, 『조선사개설』(홍문서관, 1947), 366~391쪽, 487~497쪽; 손진태, 「사화(1498-1547)」·「당쟁(1575-1819)」, 『국사대요』(을유문화사, 1949), 197~200쪽, 201~209쪽; 이병도, 「사화」, 『국사개설』(국립국민사상연구원, 1950), 75~76쪽; 이인영, 「사화와 동서분당」·「사색싸움과 세도정치」, 『국사요론』(민족사, 1958), 139~151쪽, 160~166쪽; 한우근 외, 「당쟁의 격화와 사회의 퇴폐」, 『국사신강』(일조각, 1958), 276~284쪽; 이기백, 「당쟁의 격화와 제도의 문란」·「사회 혼란」, 『국사신론』(일조각, 1963), 250~255쪽, 269~269쪽; 이상백, 「사화·당쟁」, 『한국사: 근세전기편』(을유문화사, 1962), 536~584쪽; 이상백, 「당쟁의 계속」·「절정에 오른 당쟁」, 『한국사: 근세후기편』(을유문화사, 1965), 2쪽, 27~52쪽; 박형표, 「이조상쟁의 역사」, 『국사통론』(동명사, 1965), 496~522쪽; 한우근, 「양반관료의 분열」·「17·18세기에 있어서의 양반사회의 붕괴」, 『한국통사』(을유문화사, 1970), 292~294쪽, 322~345쪽; 조좌호, 「사화와 당쟁의 발생」·「당쟁의 격화」, 『한국사통론』(박영사, 1975), 228~234쪽, 250~365쪽; 변태섭, 「조선의 당쟁에 대해서 논하라」, 『한국사요론』(개정판, 삼영사, 1977), 415~418쪽; 이준희, 「사화와 당쟁의 발생」, 『한국사개설』(명지대출판부, 1977), 154쪽; 배용일, 「사림세력의 진출과 당쟁」, 『한국사개론』(대왕사, 1993), 162~164쪽.

25)이태진, 「조선 성리학의 역사적 기능」, 『창작과비평』33, 1974, 842~856쪽; 이태진, 「黨爭을 어떻게 볼 것인가」·「조선시대 정치적 갈등과 그 해결」,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범조사, 1985), 13~26쪽, 27~44쪽; 이태진, 「序章 朝鮮中·後期 政治史理解의 방향」, 『조선후기의 정치와 균영제 변천』(한국연구원, 1985), 2~49쪽; 이태진, 「양반문화 왜 매도되었나」, 『한국사시민강좌』(일조각, 2001), 115~141쪽.

26)박봉석, 「근세중기 봉당정치기(선조-경종)」·「근세후기 세도정치기(영조~)」, 『조선사

여섯째, 탕평정치론이다. 1970년대말-1980년대초 탕평정치기 연구가 국내외에서 시작되었다. 18세기 탕평군주는 고종대에 접어들어 영조·정조의 추존사업이 행해지면서 ‘文藝君主’라는 평가가 행해졌는데 규장각 도서를 독점한 일제 관학자들도 그대로 수용하였다.²⁷⁾ 탕평정치기 ‘文藝復興’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가장 오래된 평가이기도 했다.²⁸⁾ 여기에는 봉당을 중식시킨 군주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서 비판적 봉당관은 탕평을 긍정하는 방식으로 서술되기도 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이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켜 1960년대부터 탕평군주가 힘으로만 억누르려고 한다고 비판하기 시작했고,²⁹⁾ 1980년대 봉당정치론이 본궤도에 오르자 탕평군주를 전제군주로 강도 높게 비난했다.³⁰⁾ 이는 봉당과 탕평을 극단적 대립 구도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양자는 초기 발생 원인과 변질 과정을 두루 고려해서 살펴볼 사안이지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³¹⁾ 1990년대 정조의 탕평

정해』(은문사, 1949), 210~237쪽, 238~280쪽; 변태섭, 「봉당정치의 시작-봉당정치의 성숙-봉당의 변질과 탕평책」, 『한국사통론』(삼영사, 1986), 316~317쪽, 328~332쪽.

- 27) 김백철, 「‘탕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상(태학사, 2011a), 54~56쪽; 김백철, 「1990년대 ‘정조신드림’의 대두와 배경」, 『국학연구』18, 2011b, 192쪽.
- 28) 경성대학교조선사연구회(손진태 편), 「영조·정조시대」, 『조선사개설』(홍문서관, 1947), 523~534쪽; 이병도, 「영·정조시대」, 『국사개설』(국립국민사상연구원, 1950), 83~85쪽; 이상백, 「영조의 치적」·「정조의 성세」, 『한국사: 근세후기편』(을유문화사, 1965), pp.67~73, 316~320쪽; 박형표, 「영·정조의 유신」, 『국사통론』(동명사, 1965), 535~540쪽; 강만길, 「정조: 문예부흥의 영주」, 『한국의 인간상』1(신구문화사, 1965), 394~407쪽; 변태섭, 「영·정조의 업적을 설명하라」, 『한국사요론』(개정판, 삼영사, 1977), 467~468쪽; 이준희, 「영·정조의 문화중흥정치」, 『한국사개설』(명지대출판부, 1977), 171~172쪽.
- 29) 이기백, 『국사신론』(초판, 제일출판사, 1961), 269쪽; 이기백, 『한국사신론』(초판, 일조각, 1966), 256쪽[개정판, 1976, 265쪽; 신수관, 1990, 292쪽]; 한우근, 『한국통사』(초판, 을유문화사, 1970), 328쪽[개정판, 1987, 312~313쪽]; 변태섭, 『한국사통론』(초판, 삼영사, 1986), 331~332쪽[개정판, 1990, 346쪽].
- 30) 한우근, 같은 책, 1987, 312~323쪽; 김백철, 앞의 논문(2011b), 196쪽.
- 31) 탕평의 평가는 다음 몇 가지 입장이 대표적이다. ①중도론이다. 이병도는 탕평을 당쟁의 뿌리를 뽑지는 못했으나 진처럼 참혹한 화는 없게 되었다고 평하였으며(이병

정치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단순히 봉당의 대안이나 왕권 강화의 수단이나 아니라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³²⁾ 2000년대는 1980년대 전제군주론과 1990년대 개혁군주론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제3의 관점에서 영조·정조대 정치 운영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³³⁾

도, 『신수 국사대관』(보문각, 1955), 440~441쪽), 이상백은 당쟁의 뿌리가 깊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으나 민생 및 문화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다고 조선후기 황금시대로 평하였다(이상백(진단학회 편), 『한국사 근세후기편』(을유문화사, 1965), 56~72쪽).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탕평을 왕이 중심이 되어 봉당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개혁적 성향과 보수적 성격이 모두 있으며 왕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했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160쪽).

②비판론이다. 이기백은 탕평에 대해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다는 평가를 최초로 제기하였을뿐 아니라(이기백, 『국사신론』(초판, 제일출판사, 1961), 269쪽; 이기백, 『한국사신론』(초판, 일조각, 1966, 256쪽; 개정판, 1976, 265쪽; 신수판, 1990, 292쪽), 적당주의 및 무사안일주의가 퍼져 개인이었던 도모하는 공리주의경향이 세도정치로 귀결되었다고 비평하였고(이기백, 『한국사신론』(신수판, 일조각, 1990), 292쪽), 변태섭은 “탕평책은 당쟁의 말뚝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다만 강력한 왕권으로 정파간의 극렬한 다툼을 억누르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다”고 비판하였고(변태섭, 『한국사통론』(삼영사, 1986), 332쪽). 한우근은 처음으로 ‘전제군주’로 명명하고 ‘17-18세기 양반사회의 붕괴’로 설정하고 관직안배는 정치기강을 문란하게 했다고 하였다(한우근, 『한국통사』(개정판, 을유문화사, 1987), 313쪽).

③긍정론이다. 하현강은 ‘영·정조시대의 문예부흥’을 설정하여 탕평을 전통적인 문예군주론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하현강, 『한국의 역사』(신구문화사, 1992), 240~241쪽). 이태진은 탕평을 소민을 보호한 개혁정치로 평가하고 세도정치 출현을 정조대 정치구조가 파괴된 데서 찾았다(이태진, 『사회와 봉당정치』, 『한국사특강』(서울대출판부, 1990), 176쪽; 이태진, 『절대군주정의 소민보호정치』, 『새한국사』(까치, 2012), 473쪽). 한영우는 ‘정조의 탕평책과 민국을 위한 개혁’으로 설정하여 개혁군주론을 도입하면서도 전통적 문예군주론의 입장을 강화하였다(한영우, 『다시찾는 우리 역사』(경세원, 1997), 339~345쪽).

- 32) 정조탕평의 새로운 평가는 다음참조. 이태진, 『사회와 봉당정치』, 『한국사특강』(서울대출판부, 1990); 김성운, 「정조년간의 정국구도와 그 동향」, 부산대 사학과 석사논문, 1990; 이태진, 「정조의 대학탐구와 새로운 군주론」, 『이회재의 사상과 그 세계』(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92); 김성운, 「탕평의 원리와 탕평론」, 『부대사학』15·16, 1992; 한상권, 『조선후기 사회와 소원제도: 상언·격쟁연구』(일조각, 1996).
- 33) 김백철, 『조선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개인식』(태학사, 2010); 박철상 외, 『정조의 비밀어찰, 정조가 그의 시대를 말하다』, 푸른역사, 2011;

일곱째, 眞景文化論이다.³⁴⁾ 1990년대 말부터 등장하여 2000년대에는 통설로 자리잡았다. 기초 논의는 이전 시기부터 서서히 이루어졌으나 적극적 보급은 진경산수화 등을 통해서 19세기 문화사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제기된 ‘조선중화주의’ 입론³⁵⁾과 쌍벽을 이루면서 주류세력(노론)의 사상사적·문화사적 복원까지 내포하였다.

2. 조선후기 역사상의 체계화

1990년대는 집대성된 조선시대상을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한 수많은 고민과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서 ‘조선중기 사회론’의 제창으로 이어졌다.³⁶⁾ 이는 그간 임진왜란(혹은 양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인식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구분법 자체가 사실 일제의 외세 침탈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일 뿐 아니라, 전쟁 이후 변화상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중기 사회론은 두 가지 방향의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합친 것이

김인걸 외, 『정조와 정조시대』(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역사학회 편, 『정조와 18세기』(푸른역사, 2013); 김백철,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태학사, 2014); 김자현(김백철 역), 『왕이라는 유산: 영조와 조선의 성인군주론』(너머박스, 2017); 역사비평편집위원회 편, 『정조와 정조 이후: 정조시대와 19세기의 연속과 단절』(역사비평사, 2017); 이근호, 『조선후기 탕평파와 국정운영』(민속원, 2016); 김지영, 『길 위의 조정: 조선시대 국왕행차와 정치적 문화』(민속원, 2017); Christopher Lovins, *King Chôngjo: An Enlightened Despot in Early Modern Korea*,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9; 최성환, 『영·정조대 탕평정치와 군신 의리』(신구문화사, 2020); 김백철, 『정조의 군주상: 실상과 허상의 경계』(이학사, 2023).

34) 오주석 외, 『우리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1·2(돌베개, 1998); 유봉학, 『실학과 진경문화』(신구문화사, 2013); 한국미술연구소 편, 『진경문화: 찬란한 우리문화의 꽃』(현암사, 2014).

35)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일지사, 1998);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중국 없는 중화』(인하대출판부, 2009);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유니스토리, 2013); 배우성, 『조선과 중화: 사라진 문명의 기준』(푸른역사, 2024).

36) 이태진, 「개요」, 『한국사』30(국사편찬위원회, 1998), 1~12쪽.

다. 하나는 14-15세기 집권적 양반관료제모델과 16세기 사림의 정계 진출로 나타나는 정국 운영이 전혀 다르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연구는 1970-80년대 사림연구로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여성의 지위 변화, 2000년대에는 친족제도의 변화 등을 토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 역사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논지가 제시되었다.³⁷⁾ 다른 한편으로는 수십년간 지속된 조선 후기 사회변동논쟁이 주요한 단서가 되었다. 실학담론과 자본주의맹아론의 대전제는 조선 후기에 사회적 대변동이 있었다는 점이 주요하였으나 반대론측은 고문서 연구를 통해서 양반이후의 지속성을 강조하였다.³⁸⁾ 양자의 주장은 막연하게 조선후기로 지칭되던 시공간의 범위에 대해 재검토할 기회를 제공했다. 곧 지속성의 시점은 대개 16세기와 17세기의 유사성이었고, 변화를 강조하는 자료는 17세기와 18세기의 이질성이었다. 종래 조선후기의 시작점을 16-17세기가 아니라 17-18세기로 조정한다면 얼마든지 변동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⁹⁾ 서로 다른 연구성고가 1990년대에 집대성되면서 조선 초기-중기-후기의 3시기구분법으로 나타났고, 2000년대는 좀 더 정밀한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세기별 성격을 부여하는 5시기구분법이 등장했다.⁴⁰⁾

37) 이태진, 「사림과 유향소 복립운동(상하)」, 『진단학보』34-35, 1972-1973, 상5~34쪽, 하5~33쪽;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Harvard University, 1992; 이태진, 앞의 글(1992), 129-226쪽; 이태진, 같은 글(1998), 1-12쪽;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역사비평사, 2001); 이종서, 『고려 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친족관계의 정형과 변동』(신구문화사, 2009).

38) 최승희, 앞의 글(1983), 487~524쪽.

39) 이태진, 앞의 글(1992), 129~226쪽.

40) 이태진, 앞의 글(1998), 1~12쪽; 김백철, 앞의 글, 2011a, 54~56쪽; 【3시기구분법】 국사편찬위원회, 『신편한국사』23~36(국사편찬위원회, 2002);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한국사특강』(개정판, 서울대출판문화원, 2008); 【5시기구분법】 문중양 외, 『15세기: 조선의 때이른 절정』(민음사, 2014); 한명기 외, 『16세기: 성리학 유토 피아』(민음사, 2014); 한명기 외, 『17세기: 대동의 길』(민음사, 2014); 김백철 외, 『18세기: 왕의 귀환』(민음사, 2014); 노대환 외, 『19세기: 인민의 탄생』(민음사, 2015).

따라서 문예군주론(고종대), 실학담론(1930년대), 자본주의맹아론(1960-70년대), ‘李朝’용어극복(1970년대), 봉당정치론(1980년대), 조선봉건제사회론-민중사학론(1980년대), 개혁군주론(1990년대), 조선중기사회론(1990년대), 내재적 발전론 비판(1990년대), 탕평군주 비판론(2000년대), 진경문화(2000년대) 등 다양한 학설이 대두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학설은 각기 탄생 배경이나 전제논리가 전혀 달랐다. 문예군주론은 왕정에서 스스로 평가한 역사 인식이었고, 실학담론·자본주의맹아론·민중운동사관은 망국의 현실비판·광복이후 경제개발·군부치하 민주화운동 등에서 제기한 후대의 시각이 투영되었다. 또한 실학은 사상사 기반 연구이고 사회변동론은 사회경제사가 주축이며, 봉당론·탕평론은 정치사 중심의 역사관이다. 그중 실학담론·민중사관이 조정의 무능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면, 다른 입론은 정부의 능동적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특히 조선중화주의·진경문화론은 종래 망국책임론의 대상이던 집권층의 문화적 위상까지 긍정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학설은 면밀한 검토를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점차 하나의 조선시대 역사상을 구현하는 요소로 인지되기 시작했다. 대개 양란후 조선붕괴설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변동론(혹은 내재적 발전론)은 적게는 자본주의맹아론에서, 많게는 실학담론·정치사변동·문화사담론·봉당정치론·탕평정치론 등을 포괄하여 체계화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었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내재적 발전론 비판은 뚜렷한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⁴¹⁾ 식민사학 극복을 위해서 과도한 이념 지향적 연

41) 이홍락, 「쟁점: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역사비평』41, 1997, 229~242쪽; 조석근,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재검토」, 『동향과전망』38, 1998, 62~95쪽; 이정철, 「문제는 자본주의다: 내재적 발전론 비판의 역사인식」, 『내일을여는역사』22, 2005, 192~208쪽; 최윤오,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근대로의 이행: 내재적 발전론의 역사인식」, 『내일을여는역사』22, 2005, 176~191쪽; 김정인,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 『역사와현실』77, 2010, 179~214쪽; 이영호,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152, 2011, 239~272쪽; 이경구, 「개념사와 내재적 발전」, 『역사학보』213, 2012, 49~70쪽.

구 경향에 대한 지적에는 공감하였으나 그 대안을 경제사학계가 제시한 ‘조선시대 정체성론-식민지근대화론’에는 강력히 반발하였다.⁴²⁾ 최근 실학담론 역시 실존성 문제를 두고 비판받고 있다.⁴³⁾ 이러한 고찰은 우리 역사를 비판적으로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데 주요했으나 온전한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는 자연히 역사교육모델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Ⅲ. 교육과정의 연구성과 도입

광복이후 대다수 교과서는 단독 저작이 주류를 이루었고 검정체제를 통해서 다양한 교과서가 동시에 나타났다. 군사정부가 유신을 추진하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집단체필제도가 만들어졌는데 2000년대 검정체제 이후로도 여전히 공저체제는 유지되고 있다. 또한 조선후기 역사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론 중 실학담론은 비교적 이른 시기인 1차 교육과정에서 채택되어 변화가 거의 없으며 진경문화론 역시 국정 말기인 7차 교육과정에 수용된 뒤 부침이 거의 없다. 현재 검정교과서는 대체로 이때 집대성한 내용을 모범으로 삼아서 활용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1-7차 교육과정(고교)과 2000년대 검정체제(중·고교)에서 조선후기를 대상으로 두드러진 몇 가지 변화상(사회변동론/붕당·탕평/대동·균역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42) 박평식, 앞의 논문(2013), 347~348쪽.

43) 신항수,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본 실학연구」, 『내일을여는역사』21, 2005, 200~211쪽; 조성산, 「실학개념 논쟁과 그 귀결」, 『한국사시민강좌』48, 2011, 20~36쪽; 노관범, 「전환기 실학개념의 역사적 이해」, 『기억의 역전: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소명출판, 2016), 276~319쪽; 노관범, 「근대초기 실학의 존재론: 실학인식의 방향 전환을 위하여」, 『역사비평』122, 2018, 447~473쪽.

44) 「(2011개정)중학교 교육과정」·「(2011개정)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2011.08.09.).

1. 사회변동론의 채택

교과서 차원에서 조선시대를 인식하는 방식은 단원의 표제설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차 교육과정 『우리나라 문화사: 고등 국사』(홍이섭/정음사/1957)에서는 조선시대를 조선문화전기(1392-1592), 조선문화중기(1593-1863), 조선문화후기(1864-1910)로 나누었다. 2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는 ‘조선시대의 사회와 문화’(한우근/인문계/1968), ‘조선시대의 생활’(문교부/실업계/1968)로 각기 설정되어서 미군정기 이후 문화사 중심의 시각이 수용되었음을 보여준다.

1974년 3차 교육과정 전반은 국정화 조치로 불협화음 속에서 간신히 편찬이 이루어졌으므로 『고등학교 국사』(1974)에는 ‘3) 조선사회’로 단원명이 표기되었다가 3차 교육과정 후반(1979)부터 변화가 생겼다. ‘Ⅲ. 조선사회’ 단원명 아래에 ‘5.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을 처음으로 설정함으로써 양란 이후 조선 사회가 발전하고 있다는 최신성과가 반영되었다.⁴⁵⁾ 당시 조선초기 사회상에 대해 차츰 긍정적 인식이 형성되고 있었으나 조선후기 제도개혁이나 사회상은 여전히 비판적 시선이 지배적이었는데,⁴⁶⁾ 1960-70년대 자본주의맹아론 연구가 진척되자⁴⁷⁾ 그 성과를 흡수한 것이다.

1982년 4차 교육과정부터 외형적으로 고등학교 『국사(상·하)』로 분권되어 분량이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장절의 짜임새가 탄탄해져 조선시대상의 체계적 서술도 추진되었다. 이때 ‘조선전기’와 ‘후기’를 ‘근세’와 ‘근대’로 표현하였다. 광복이후 도입된 ‘근세’ 용어는 시간적 근접성 외에도 당송변혁기론을 지칭하는 시대구분론 성격도 내포했

45) 다만 이때 변화기점도 한번도 검증된 적 없이 막연히 양란피해가 막대했을 것이라는 추정하에서 변동을 임의로 연결시켰다. 조선후기 사회변동논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1990년대에는 변화의 기점을 양란에서 17-18세기로 재조정하는 논의도 이루어져 ‘조선중기 사회론’이 대두하였다. 이태진, 앞의 글(1998); 김성우, 앞의 책(2001).

46) 차미희, 앞의 책(2011), 78쪽; 박평식, 앞의 논문(2013), 343쪽.

47) 김용섭, 앞의 논문(1963).

데,⁴⁸⁾ 한동안 조선시대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여왔다.⁴⁹⁾ 4차 교육과정부터 ‘근세’의 범위는 조선전기에 국한되었고 오히려 ‘근대’에 주목하여 조선후기는 ‘근세’에서 분리시켜 ‘근대’ 혹은 ‘근대사회의 태동’으로 재설정되었다. 이는 이전 교과서에서 통용되던 ‘근대’가 최소한 개항이후를 지칭하는데 비하여 상당히 앞선 개념이다.⁵⁰⁾ 더욱이 4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하)』의 ‘I. 근대사회의 태동’에는 3차 교육과정을 계승하여 첫장의 표제가 ‘1. 조선후기 사회변동’으로 설정되었다. 1990년 5차 교육과정부터 ‘1. 근대사회로의 지향’이라는 장이 설정되어 나열식에서 벗어나 사회변동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導論이 제시되었다.

48) 內藤湖南, 『中國近世史』(東京: 弘文堂, 1947), pp.1~18[內藤湖南, 「支那上古史·支那中古の文化·支那近世史」, 『內藤湖南全集』10(東京: 筑摩書房, 1969); 허사유끼 미야가와(이개석 역), 「內藤宮崎시대구분론」, 『중국사시대구분론』(창작과비평사, 1984), 31~33쪽; 김백철, 앞의 논문(2013), 282~286쪽.

49) 진단학회 편, 「근세의 전기·근세의 중기·근세의 후기」, 『국사교본』(군정청 문교부, 1946); 신석호, 「일곱째 가름 近世朝鮮과 그 사회생활은 어떠하였는가?」, 『중등학교 사회생활과 우리나라의 생활』(동방문화사, 1948); 이병도, 「근세사(이씨조선)」, 『조선사대관』(동지사, 1948); 이병도, 「근세사: 근조선」, 『국사대관』(동지사, 1950); 박봉석, 「근세사(이조)」, 『조선사정해』(온문사, 1949); 손진태, 「이씨조선시대(근세사) 및 현대사」, 『국사대요』(을유문화사, 1955); 이상백, 『한국사: 근세전기편』(을유문화사, 1962); 이상백, 『한국사: 근세후기편』(을유문화사, 1965); 한우근, 「근세」, 『한국통사』(을유문화사, 1970); 이화여대 한국문화사편찬위원회 편, 「근세사회와 문화」, 『한국문화사』(이화여대출판부, 1978); 변태섭, 「근세사회」, 『한국사통론』(삼영사, 1986); 하현강, 「근세사회」, 『한국의 역사』(신구문화사, 1990); 한영우, 「근세 관료국가-조선」, 『다시찾는 우리역사』(경세원, 1997); 노대환, 「글로벌한국사3: 대항해시대와 한국근세사」(풀빛, 2011);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근세사회의 발전」, 『고등학교 국사(상)』(문교부, 1982);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근세사회의 발전」, 『고등학교 국사(상)』(교육부, 1990);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근세사회의 발달」, 『고등학교 국사(상)』(교육부, 1996);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근세의 정치」, 『고등학교 국사(상)』(교육부, 2002).

50) 이러한 표현은 2009년 김정이후 단원명에는 ‘근세’나 ‘근대’ 대신에 ‘조선사회의 성립’과 ‘조선사회의 변동’으로 대체되었다. 이는 2000년대 학계에서 시대사구분논쟁이 사라지면서 ‘중세’, ‘근세’, ‘중세의 해체기’, ‘근대의 태동’ 등으로 구분하는 대신에 ‘조선시대사’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역사연구회 편,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1·2(청년사, 1996); 조선시대사학회 편, 『조선시대사학보』1~110, 1997~2024; 홍순민 외, 『조선시대사』1·2(푸른역사, 2015); 김백철, 앞의 책(2021).

이러한 국정교과서의 기조는 2000년대 검정교과서에도 그대로 이어졌지만 검정초기 일시적 혼란도 나타났다. 이른바 ‘양난이후 붕괴설’이 재등장한 것이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하 ‘1차검정’ 약칭)에서 『고등학교 한국사』는 ‘Ⅲ. 조선사회의 변화와 서구열강의 침략적 접근’을 단원명으로 고정하였다. 교과서 6종 중 2종(법문사·삼화출판사)은 조선후기 정치사는 배제되어 있으며 철저히 사회경제사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마치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망하고 개항을 맞이한 듯한 인상을 준다. 1종(미래엔)은 종래의 국정교과서의 표제를 참고하거나(‘근대의 태동’→‘조선에서도 근대의 기운이 움트다’), 당파성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다(‘붕당정치의 두 얼굴’, ‘붕당정치는 밥그릇 싸움이다’). 반면에 1종(지학사)은 균형 잡힌 조선후기 정치사를 서술했고, 1종(천재교육)은 세부 항목을 두어 훨씬 체계적으로 조선후기사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검정교과서의 편찬 지침이 되는 교육과정해설에서 비롯되었다. 당초 교육과정 연구개발보고서에는 양란 이후 변화부터 개항까지 이어서 소개했는데 조선후기 근대사회로의 주체적 역량을 설명하기 위함으로 적시하였으나⁵¹⁾ 교육부 고시에는 대거 내용이 축소되어 조선후기 서술항목이 하나로 줄어들면서 정치사의 서술의무가 사라졌다.⁵²⁾ 과거에 교육을 받

51) 보고서의 단원개관에는 “양난이후 흥선대원군 집권까지 조선후기사회의 변동, 사회 개혁의 움직임, 서구열강의 아시아침입, 외세의 침입에 대응하는 조선사회의 모습을 다루며 우리역사의 전개와 세계사의 움직임을 결합하여 이해하도록 구성한다……조선후기에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주체적인 움직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고 적시하였다. 또한 교수학습내용에는 “조선후기는 양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를 재건하고 대내외적 변화에 부응하는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붕당정치가 전개되는 가운데 부세제도, 군사 제도 등을 개혁하였다”고 하였다. 전재철 외, 『고등학교 사회과(역사포함) 교육과정 해설 연구개발』(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 120~121쪽.

52) 해설서의 10학년(고교) 한국사에는 ‘(2)조선사회의 변화와 서구열강의 침략적 접근’을 설정하고 “양난이후 개항이전까지 조선사회의 변동과 사회개혁의 움직임 외세의 침략적 접근과 조선의 대응을 다룬다”고 했으나 세부항목의 조선후기 내용은 “①조선후기에 근대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음을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는 1항목에 그쳤다. 「2009 개정 고등학교 사회(역사)과 교육과정 및 해설」(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12.23.), 8쪽.

은 경우 내재적 발전론과 양란 이후 붕괴설을 혼동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역사상 체계화는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편제된 이론 틀인데, 조선후기사 자체가 삭제됨으로써 광복 이후 역사학계의 노력은 무위로 돌아갔다. 설령 보고서의 양란 이후 주체적 변화를 강조하더라도 이 역시 외제적 변화를 강조한 방식이므로 그동안 학계에 제기된 ‘조선후기 사회변동논쟁’이나 ‘조선중기사회론’과는 다소 동떨어진 설명틀이다.⁵³⁾ 하지만 교과서에서 아직 조선전기·후기의 2시기구분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최소한 긍정적 변화로서 서술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2011년개정교육과정(이하 ‘2차검정’ 약칭) 및 2015년개정교육과정(이하 ‘3차검정’ 약칭)에서 대체로 해소되었으나 3시기(혹은 5시기)구분법 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2. 붕당·탕평의 길항

정치사 서술의 경우 당쟁사관과 전제군주론을 극복하는데 상당한 파란을 겪었다. 1차 교육과정 『우리나라 문화사: 고등국사』(홍이섭/정음사/1957)에서는 ‘1. 정치의 문란과 사회상태’로 ‘당과의 싸움’, ‘당쟁’ 등이 번갈아가며 사용하면서 자세히 다루었는데 당파성론이 가장 강하게 투영되었으며 아직 탕평은 수록되지 못했다.

2차 교육과정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한우근/1968)에서는 ‘제3장 귀족의 분열과 상극’과 그 아래에 ‘1. 양반사회의 모순’, ‘2. 사회와 당쟁’ 등을 설정한 뒤 바로 세도정치로 설명이 이어졌다.⁵⁴⁾ 반면에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문교부/1968) 역시 ‘4. 사회조직과 정치의 혼란’ 등을 제시하여 정치사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나 동시에 ‘7. 실학운동

53) 보고서에는 양난의 국제전 양상을 전제로 국제사회와 연동된 조선사회를 그린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선후기 사회변동논쟁에서 국내 신분제 등의 변화가 양란 직후보다는 백여년이 지난 18세기에 더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전제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54) 한우근,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을유문화사, 1968), 149~153쪽, 183~184쪽.

과 문화의 새동향'을 설정하고 그 세부항목으로 '영·정조의 중흥정치'라는 항목을 두어서 탕평을 문예군주론의 입장에서 세종대와 비교서술했다.⁵⁵⁾ 3차 교육과정 후반(1979) 『고등학교 국사』에는 당쟁사관이 여전히 남아있었으나 탕평은 왕권강화·문물제도·부국강병 등에 초점이 맞추어 서술되었다.⁵⁶⁾

1982년 4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하)』의 '1. 조선후기 사회변동' 하위항목에는 '(1)정치·군사상의 변화'가 설정되어 정치제도인 비변사와 군사제도인 5군영·속오군을 중심으로 제도사를 새로이 추가하고 정치사는 附庸으로 처리하였다. 정치사의 봉당·탕평은 3차 교육과정을 약간 수정했는데 표제는 '당쟁의 격화와 탕평책'에서 '정치적 대립격화'와 '탕평책과 정치안정'으로 순화했으나 본문에는 여전히 '당쟁'을 사용하였고, 탕평 역시 종전 서술 방식을 답습했다.⁵⁷⁾

민주화 이후 봉당정치론과 민중사학론이 강하게 제창되었다. 1990년 5차 교육과정부터는 봉당정치론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⁵⁸⁾ 봉당·탕평·세도정치가 비교적 균형있게 서술되었다. 봉당과 탕평의 장·단점이 비판적 입장에서 소개되었다.⁵⁹⁾ 1996년 6차 교육과정에서 민중운동사관이 적극 반영되면서 '(1) 통치체제의 개편' 아래에 '지배체제의 모순'을 새롭

55)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문교부, 1968), 110~113쪽.

56)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문교부, 1979), 176~178쪽.

57)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문교부, 1982), 6~9쪽.

58) 신유아, 앞의 논문(2021), 104쪽.

59) “봉당정치는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의식과 정치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언론활동을 통해 국왕의 신임을 얻어 국정을 주관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그것은 여론을 알세운 것으로서, 비판세력이 공존하며, 특정봉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산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어서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봉당정치가 변질되어 공론과 공리보다 집권욕에만 집착할 때에는 균형관계가 깨어져서 정쟁이 끊이지 않고 사회가 분열되었다.……양반세력의 균형을 꾀하려는 탕평론의 제창과 관직의 안배만으로는 지배체제의 모순을 시정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탕평론 자체는 전제적 통치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모순의 시정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교육부, 1990), 18쪽, 21쪽.

게 추가하였다. 또한 19세기 ‘민란’은 ‘농민봉기’로 용어도 변화하였다. 1990년대 정조에 대한 개혁군주평가가 이루어졌음에도 교과서에는 여전히 “문물을 정비하면서 절대왕정을 과시한 정조였지만, 그도 봉당 사이의 융화나 봉당 자체의 해체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는 완곡한 비판이 수록되었다.⁶⁰⁾

2002년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는 외형적으로 시대사보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주제별 분류사인 1책으로 재편집되어 합본된 점이 특징이다.⁶¹⁾ 정치사 분야에서는 “영조의 탕평책은 봉당정치에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왕권으로 봉당 사이의 치열한 다툼을 일시적으로 억누른 것에 불과하였다”고 하면서 정조에 대해서는 부정적 서술이 모두 삭제되었다.⁶²⁾ 영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1960년대 개설서 시각인데,⁶³⁾ 향후 검정교과서에는 영조·정조를 가리지 않고 사용되었다. 전반(2002)에는 개설서에서 사용한 새로운 설명틀⁶⁴⁾이 교과서의 도움말인 ‘탕평정치의 성격’에 그대로 반영되어 왕의 개인적 역량 중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개혁적 성향, 체제 정비의 보수적 성격 등 탕평정치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서술하였다.⁶⁵⁾ 후반(2006)에는 탕평정치의 분량이 다소 축소되었고 도움말도 ‘봉당정치의 성격’이 대신 들어가면서 봉당의 장·단점을 제시하였다.⁶⁶⁾

60)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교육부, 1996), 19쪽.

61) 신소연, 「역사 교육과정의 개정과 계열성 적용의 난맥」, 『역사교육』124, 2012, 105쪽.

62)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앞의 책(2006), 101쪽.

63) 이기백, 『국사신문』(초판, 제일출판사, 1961), 269쪽.

64)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역사비평사, 1992), 160쪽.

65) “탕평정치는……봉당사이의 대립을 조정하고 사회경제적 변화 위에서 지배층에 부분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개혁적인 측면이 있었다.……근본적으로 왕권을 중심으로 권력의 집중과 정치세력의 균형을 피하면서 기존 사회체제를 재정비하여 안정시키려는 것이었다.……왕의 개인적인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어서 탕평정치가 구조적인 틀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는 어려웠다.”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초판, 교육인적자원부, 2002), 127쪽.

66) “봉당은 학파적 성격과 정차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조정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경우……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토론을 벌였다.……합좌기군인 비변사와 인

한편 2000년대 검정체제 이후 정치사 서술의 혼란상이 나타났다. 교과서 편찬에 전문성을 지닌 해당 시기 전공자 참여가 줄어들면서 과거에 자신이 교육받은 구학설의 내용을 검정교과서에 담아내는 과거회귀적 서술도 나타났다. 5차 교육과정에서 봉당정치론이 채택되면서 당파성론(당쟁사관)은 퇴출되었는데 검정교과서를 통해서 부활하였다. 1차 검정 『중학교 역사(하)』(대교)는 ‘봉당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라’로 표제를 정해서 당쟁사관을 직접 수용했다. 또한 상당수 1-2차 검정본에서 이익의 『성호집』 「곽우록」을 읽기 자료나 본문 서술을 통해 소개하면서 관직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과거급제자 증가로 관직 쟁탈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봉당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였다.⁶⁷⁾ 반면에 2차 검정시 대체로 이조전랑의 인사권 문제가 언급되었고, 공론정치(좋은책신사고)나 견제·공존(미래엔·천재교육·천재교과서·비상교육·지학사·교학사)도 선별적으로 수록되었다. 봉당정치는 1차 검정보다 2차 검정에서 중립 서술이 늘어났고 3차 검정부터 당파성론은 퇴출되고 대체로 장단점을 두루 서술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었다.

아울러 탕평정치도 신·구학설의 동거현상이 나타났다. 19세기 후반 문예군주론, 1960년대 전제군주론, 1990년대 개혁군주론 등이 혼용되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서술을 그대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0년대는 종래 문예군주에 더하여 개혁군주 이미지가 확산되면

론기관인 3사의 기능이 중시되었다, 재야에서 공론을 주도하는 산림이 출현하였고 서원이나 향교가 지방사족을 의견을 모으는 수단으로 기능하였다.……공론도 백성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층이 의견을 수렴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2판, 교육인적자원부, 2006), 99쪽.

67) 1차검정『한국사』(미래엔), 2차검정『역사1』(교학사/두산동아), 『한국사』(교학사/리베르스쿨/미래엔/금성). ※이익의 설명은 실제 역사상과 맞지 않는데 관직은 조선시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후기로 갈수록 급제자가 폭증했음에도 봉당은 약 1세기만 등장했다. 봉당정치기보다 더 많은 과거급제자가 등장한 19세기에는 그 자취를 감추었으므로 합리적 분석으로 볼 수 없다. 이 내용은 시데하라의 『韓國政爭志』에 운문되어 수록되면서 당쟁사관논리로 식민지교육에 사용되었다. 그 의도가 불순할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읽기자료로 채택하기에 부적절하다. 김백철, 앞의 글(2011a), 57쪽; 김백철, 앞의 책(2021), 287~288쪽.

서 종래 전제군주 이미지는 상당히 탈각되었는데 장단점을 모두 소개한다는 명분 하에 함께 실린 것이다. 긍정적 시선의 경우 영조대 개혁정치, 탕평채, 탕평비, 준천공사, 정조대 개혁정치, 수원화성(혹은 화성행차), 규장각(혹은 각신) 등이 사진자료, 읽기자료, 본문항목 등으로 설정되었다.⁶⁸⁾ 부정적 시선의 경우 봉당을 힘(혹은 강력한 왕권)으로 억누르려고 했을 뿐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했다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했다는 설명(전제군주론)이 다수를 점하였고,⁶⁹⁾ 척신정치 및 소수의 권력 독점 비판 등도 일부 교과서에서 답습되었다. 일부에서는 탕평을 부정하거나⁷⁰⁾ 긍정함으로써⁷¹⁾ 한쪽 성격만 부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봉

68) <표 2> 1-3차검정교과서 영·정조대 탕평정치 서술방식

	개혁정치	탕평채	탕평비	준천
영조대	2차검정『역사1』(천재교육), 3차검정『역사2』(동아출판/금성출판사).	1차검정『역사(하)』(미래엔), 2차검정『역사1』(천재교과서), 3차검정『역사2』(레비르스쿨), 『한국사』(해냄에듀).	1차검정『역사(하)』(교학도서/미래엔/비상교육/대교/천재교육), 2차검정『역사1』(교학사/두산동아/좋은책신사고/비상교육/미래엔/지학사/천재교육), 『한국사』(리베르스쿨/미래엔), 3차검정『역사2』(지학사/비상/천재교육/미래엔/동아출판/리베르스쿨, 금성출판사), 『한국사』(씨마스/천재교육/미래엔/지학사/리베르스쿨/비상).	2차검정『역사1』(천재교과서/금성출판사/미래엔), 3차검정『역사2』(비상/동아출판).
정조대	개혁정치	규장각(또는 각신/초계문신)	수원화성(또는 화성행차)	
	1차검정『역사(하)』(미래엔/천재교육/비상교육), 2차검정『역사1』(천재교과서/천재교육/두산동아/좋은책신사고/미래엔/비상교육), 3차검정『역사2』(미래엔/동아출판/금성출판사).	1차검정『역사(하)』(미래엔/대교/천재교육/지학사/비상교육), 2차검정『역사1』(천재교과서/천재교육/금성출판사, 좋은책신사고/비상교육/미래엔/지학사), 『한국사』(교학사/지학사/리베르스쿨), 3차검정『역사2』(미래엔/천재교육/지학사/비상/동아출판/금성출판사), 『한국사』(씨마스/금성출판사/동아출판/지학사/리베르스쿨).	1차검정『역사(하)』(비상교육/천재교육/미래엔/교학사/교학도서/지학사), 『한국사』(미래엔), 2차검정『역사1』(천재교과서/천재교육/두산동아/좋은책신사고/미래엔/비상교육/교학사/금성출판사), 『한국사』(미래엔/리베르스쿨), 3차검정『역사2』(미래엔/천재교육/지학사/비상교육/동아출판/리베르스쿨/금성출판사), 『한국사』(천재교육/씨마스/미래엔/비상).	

69) 1차검정『역사(하)』(교학도서/교학사/비상교육/천재교육), 2차검정『역사1』(천재교과서/천재교육/두산동아/금성출판사/좋은책신사고/비상교육/교학사), 3차검정『역사2』(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리베르스쿨/동아출판), 2차검정『한국사』(미래엔), 3차검정『한국사』(미래엔/금성출판사/동아출판) 등이다. 단, 1-3차검정『한국사』는 전통시대 분량제한으로 사실설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당의 입장을 취한 경우는 탕평을 비난하는 논지를 택했고,⁷²⁾ 탕평의 입장을 지지할 경우 봉당을 비판하는 서술 태도를 보였다.⁷³⁾ 그럼에도 몇몇 교과서는 탕평에 대해 가치중립적 표현을 지향하면서 정치체제의 구조적 문제로 설명하는 세련된 서술을 보여주기도 했다.⁷⁴⁾ 대개 2차 검정부터 편향된 시각은 점차 개선되었고,⁷⁵⁾ 3차 검정에는 전제군주론을 제외하면 거의 중립적 시각으로 바뀌었다.

3. 대동·균역의 인식

경제사 서술의 경우 연구 성과 자체의 변화뿐 아니라 전통시대를 인식하는 당대 사회배경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차 교육과정 『우리나라 문화사: 고등국사』(홍이섭/정음사/1957)에서는 비록 나열식 서술이지만 대동법과 세법 변화로 인한 경제의 긍정적 영향이 서술되었고 아직 균역법은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삼정문란의 차원에서만 양역문제가 거론되었다. 2차 교육과정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문교부/1968)에는 ‘6. 제도의 개편과 경제생활의 발달’이 설정되었으나 대동·균역에 대해 개별 사실을 나열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간략히 입법취지만 수록했다.⁷⁶⁾

반면에 3차 교육과정 후반(1979)부터 ‘(2)세제의 변화’를 별도로 설정하여 배경·경과·영향 등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대동의 경우 부호의 부담은 늘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크게 줄었으며 부를 축적한 자

70) 2차검정 『한국사』(교학사) 등이다.

71) 3차검정 『한국사』(리베르스쿨/해냄에듀) 등이다.

72) 1차검정 『역사(하)』(교학도서/미래엔), 2차검정 『역사1』(지학사) 등이다.

73) 1차검정 『역사(하)』(대교) 등이다.

74) 1차검정 『역사(하)』(지학사), 1차검정 『한국사』(지학사/천재교육), 2차검정 『한국사』(지학사), 3차검정 『한국사』(씨마스/천재교육) 등이다.

75) 2차검정 『역사1』(천재교과서/천재교육/두산동아/금성출판사/미래엔/비상교육), 3차검정 『역사2』(금성출판사/미래엔/비상교육/천재교육/리베르스쿨/동아출판) 등이다.

76)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문교부, 1968), 110~113쪽.

본가가 생기고 수공업 생산이 활력을 띠었으나 별공·진상이 남아서 현물 징수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소개하면서 장단점을 중립적 시선에서 서술했다.⁷⁷⁾ 균역 역시 감필·선무군관·결작·어염선세 등을 소개하면서 국가의 수입이 줄지 않으면서 가난한 농민도 혜택을 받았으나 추후 결작이 농민에게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수록했다.⁷⁸⁾ 1982년 4차 교육과정에는 대동·균역의 경우 3차 교육과정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⁷⁹⁾ 당시 연구 단계를 감안해보면 대동은 1960년대 이미 개혁성을 밝힌 연구가 산출된 데 비해서 균역은 1990년대에 새로운 시각이 본격화되므로 집필진이 최대한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듯하다. 그러나 세원의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은 결작을 그보다 훨씬 비중이 높은 어염선세보다 앞에 둔 다든가, 액수가 적은 결작 부담이 농민에게 전가되어 실패했다는 논지는 실제 역사상과 다소 동떨어진 비판이다.⁸⁰⁾

1990년 5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개혁에 대해 종래(3-4차 교육과정)의 ‘세제의 변화’에서 ‘수취체제’로 소재목을 변경하였다. 이후 교과서에서 ‘세제’, ‘부세’, ‘수취’ 등이 혼용되고 있다. 대동·균역은 3-4차 교육과정의 기본골격에다가 비판의 농도가 상당히 강해졌다. 대동의 경우 상납미 비율이 높아져서 지방관아의 재정이 악화되어 농민 수탈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⁸¹⁾ 균역의 경우 감필·선무군관·결

77)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같은 책, 1979, 179~180쪽.

78)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같은 책, 1979, 181~182쪽.

79)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같은 책, 1982, 11~13쪽.

80) 균역에서 結作(結錢/結布)은 주요세목을 보충하는 세제로서 액수도 2斗(혹은 5錢)로 대동미(12두)와 비교해도 적은 편으로 농민이 피해를 입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는 차문섭이 1포 감필로 부담이 경감되었지만 다른 양역으로 대체하는 방식은 근본적 개혁이 아니라고 비판한 데에서 비롯되었고(차문섭, 앞의 논문(1961), 하144쪽), 이후 19세기 삼정문란의 책임까지 균역에 전가하면서 확산된 것이다(차문섭, 앞의 글(1976), 260~276쪽). 반면에 정연식은 균역의 장단점을 두루 살폈는데 비판론을 수용하면서도 漁鹽船稅는 토호로부터 해민을 보호하고 결미는 경제력이 없는 민에게 균등과세 실현에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정연식, 「균역법시행과 그 의미」, 『(신편)한국사』32(국사편찬위원회, 1997), 196~197쪽).

81)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같은 책, 1990, 30~31쪽.

작어염선세가 소개되었는데 경작 부담이 소작농에게 돌아가고 족장·인정의 폐단으로 세도정치기 전국적 농민 저항을 받았다고 평가하였다.⁸²⁾

1996년 6차 교육과정에서는 민중운동사관이 적극 반영되면서 ‘(1)통치체제의 개편’ 아래에 ‘지배체제의 모순’을 신설하여 대동·균역을 서술하였고 19세기 ‘민란’은 ‘농민봉기’로 용어도 변화하였다. 대동의 경우 ‘상품화폐경제’가 처음으로 한 단어로 취급되면서 영향관계가 수록되었고,⁸³⁾ 농민층분해까지 언급했음에도 진상·별공존속과 소작인전가 등을 들어서 비판했다. 균역의 경우 감팔·결작어염선세·선무군관 등을 제시하여 세금의 규모는 어염선세·선무군관이 훨씬 많았는데도 소액에 불과한 결작을 우선순위로 바꾸어 놓았다.⁸⁴⁾ 그러면서 균역의 비판으로 소작농전가를 들어서 농민부담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대동·균역은 3-5차 교육과정을 답습하면서도 소작농전가설이 균역에만 서술되었는데 이것이 대동까지 확대되어 조선후기 부세체제를 모순으로 보는 시각이 훨씬 강해졌다.⁸⁵⁾ 이후 국정·검정교과서에는 소작인전가설이 ‘傳家의 寶

82)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같은 책, 1990, 32쪽.

83) ‘상품화폐경제’는 자본주의·맹아론계열에서 사용한 용어인데(강만길, 「상품경제의 발달」, 『한국사』13(국사편찬위원회, 1976, 323쪽; 최완기, 「朝鮮後期 經濟史研究의 動向과 特性」, 『한국사론』24(국사편찬위원회, 1994, 4쪽), 4차교육과정에는 ‘상품과 화폐경제의 발달’이 본문서술에 쓰였고(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문교부, 1982), 20쪽), 6차교육과정에는 대동법의 효과로 ‘상품화폐경제’의 편입이 본문에 들어갔으며(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하)』(교육부, 1990), 14쪽), 7차교육과정에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이 표제로 사용되자 1-3차검정 교과서도 답습하였다. 그런데 역사학계에서는 ‘상품·화폐’가 활성화된 상업경제로 간주하지만 경제학계에서는 ‘상품화폐’가 ‘commodity money’의 번역어로서 ‘현물화폐’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경제학에서 차용한 뒤 그 의미가 제대로 전송되지 않으면서 개념착종이 일어난 듯하다. 따라서 이렇게 설명하면 조선후기 상평통보가 ‘법정화폐(lawful money)’로서 보편화된 경제와 정반대상황이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김백철, 앞의 책(2021), 252쪽.

84) 김백철, 앞의 논문(2015), 73~76쪽.

85) 이는 18세기말 소작인상황의 비판에서 비롯되었는데(최완기, 앞의 논문(1990), 169쪽), 해당주장의 근거는 畝作(打租/打作: 1/2)에서 賭租(定租: 1/3)으로 바뀌어 부담이 내려가는 대신에 전세·중자부담은 소작인이 졌는데 이때 官吏加斂·재해가 있으면 농민이 부담을 떠안다는 것이다(李世永, 「18,9세기 곡물시장의 형성과 유통구조의

刀'처럼 활용되었다.

2002년 7차 교육과정은 세계개혁의 경우 종래(6차 교육과정) '지배체제의 모순'에서 7차 교육과정의 '통치체제의 개편'내 '수취체제'로 표제가 바뀌었다. 대동은 상품화폐경제를 발전시켰음에도 운영 과정에서 폐단이 일어나서 농민은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으며, 균역은 감필·선무·군관포·어장·세·선박·세·결작 등을 소개하면서 결작부담이 소작농민에게 돌아가고 균적문란으로 농민부담이 가중되었다고 비판했다.⁸⁶⁾ 이때 설명방식은 3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답습한 것이다. 특히 핵심 항목인 어염·선세를 처음으로 '잡세'로 소개했는데, 이는 세법의 취지를 다소 다르게 파악한 듯하다.

한편 2000년대 검정체제 하의 경제사 분야에서 개혁론과 구체체론은 한동안 동거하였다. 조선후기를 설명하는 틀로서 경제사의 대동·균역은 정치사의 봉당·탕평과 비슷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앞서 3-7차 교육과정에서 대동은 상업 발달에 영향을 미쳤으나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서 폐단이 생겼다고 평가했으며, 균역 역시 결작이 소작농에게 전가되고 균적이 문란해져서 농민부담이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1차 검정시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가 2차 검정부터 비로소 다소 중립적 관점으로 변화했다.

경제사와 정치사를 함께 살펴보면 1-3차 검정시 교과서 시각을 한눈에 가늠해볼 수 있다. 분량 변동이 잦았던 『고등학교 한국사』에 비해

변동」, 『韓國史論』9, 1983, 18쪽). '소작인전가론'의 실상은 소작료하강에 따른 부대비용의 추가부담이었고 관리가림·재해상황은 특별한 경우이므로 세법설명에 19세기 삼정문란을 18세기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오히려 대동으로 양반지주에게 과세가 집중되어(한영국, 앞의 글(1998), 491쪽 註20) 백성의 부담이 1/5로 경감되었고(이정철, 앞의 책(2012), 32쪽), 17-18세기 사람들은 대동을 "백성을 편하게 하고 나라를 넉넉하게 하는데 이보다 편리한 것이 없고" "대동실립이후 역을 부담하는 백성의 폐단이 없어졌다"고 극찬하였다(『承政院日記』, 崇禎 11年(인조16) 11月 6日(甲子)·康熙 51年(숙종38) 8月 24日(乙亥)·康熙 52年(숙종39) 5月 6日(壬午)).

86)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앞의 책(2002), 173쪽;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같은 책(2006), 165쪽.

서 전통시대 비중이 일정했던 『중학교 역사』의 경우, 17-18세기 경제(대동-균역)나 정치(붕당-탕평)에 대해 비교가 용이하다.⁸⁷⁾ 1차 검정은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모두 부정적 서술이 많은 편이었는데 당파성론(관직다툼·보복론)·전제군주론·개혁무용론(소작인전가론) 등이 보인다. 2차 검정은 경제개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정치개혁 중 붕당에 대해 중립적 서술이 늘어났으나 당파성론(보복론)·전제군주론이 여전히 확인된다. 3차 검정부터 경제개혁은 대부분 긍정적 서술이 관철되었고 정치개혁도 대체로 중립적 서술로 바뀌었으나 전제군주론은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잔존하여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표 3> 참조).

IV. 맺음말

광복이후 교과서 편찬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역사관을 회복하는데 주요한 책무로 간주되었다. 학계에서는 임진왜란 이후 망해가던 왕조라는

87) <표 3> 1-3차검정시 중학교 『역사』 17-18세기 평가비교

2011년검정 역사하	경제평가		정치평가		2012년검정 역사1	경제평가		정치평가		2019년검정 역사2	경제평가		정치평가	
	대동	균역	붕당	탕평		대동	균역	붕당	탕평		대동	균역	붕당	탕평
교학도서	한계	한계	한계	한계	교학사	N/A	개혁	(중립*)	한계	금성출판사	개혁	개혁	중립*	중립
교학사	한계	한계	한계	한계	금성출판사	개혁	개혁	한계	한계	동아출판사	개혁	개혁	중립	중립*
대교	개혁	개혁	한계	한계	두산동아	개혁	개혁	한계	중립*	리베르스쿨	개혁	개혁	중립	중립*
미래엔	한계	한계	중립*	중립*	미래엔	개혁	개혁	중립*	개혁	미래엔	개혁	개혁	한계	중립*
비상교육	한계	한계	한계	중립*	비상교육	개혁	개혁	중립*	중립*	비상교육	개혁	개혁	중립*	중립*
지학사	한계	한계	한계	중립*	좋은책신사고	한계	한계	중립*	한계	지학사	N/A	개혁	중립	중립
천재교육	개혁	개혁	중립*	중립*	지학사	N/A	개혁	중립*	한계	천재교육	개혁	개혁	중립	중립*
					천재교과서	N/A	N/A	중립*	한계	N/A: 해당 없음, 중립: 장·단점 비교, 개혁: 최신평가, 한계: 종래평가.				
					천재교육	N/A	개혁	중립*	중립*					

-전거: 본표는 선행연구(김백철, 앞의 책(2023), 86-87쪽 註6)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였음(*: 변경 표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상사(실학담론), 사회경제사(자본주의맹아론), 정치사(붕당·탕평), 경제사(대동·균역), 문화사(진경문화) 등을 통해서 내재적 발전론을 구성하였다. 교과서는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조선 후기 역사상을 채택해나갔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979년(3차교육과정후반) 사회변동론 시각이 공식적으로 표방되면서 자본주의맹아론이 수록되었고 1990년(5차교육과정) 사회변동론이 강화되면서 민중사관과 붕당정치론이 채택되었으며 1996년(6차교육과정) 민중사관이 짙어졌고 2002년(7차교육과정) 정조의 개혁정치, 과학기술의 연구성과, 진경문화론 등도 들어가면서 중립적 입장으로 방향을 수정해갔다. 이러한 조선 후기 역사상은 2000년대 검정체제 회복 후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주요 대분처럼 활용되었다.

교과서 편찬은 학계 연구뿐 아니라 정권교체와도 영향을 받으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었다. 잦은 검정교과서 개편·폐지·복구뿐 아니라 내용상 신·구학설의 동거 현상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전반적으로 조선 후기 사회변동론을 취하였으나 망국론(혹은 해체기론)과 내재적 발전론을 혼동하였고, 전체 장절설계에 대한 일정한 기준점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검정체제 하 자유로운 서술 지침은 계통 없는 백화점식 종합서술로 나타났다. 동시에 민중사관의 구체제론과 전통시대 재평가론이 뒤섞였다. 혁명론은 조선 후기 전체에 적용되다가 17-18세기 붕당·탕평론, 18-19세기 상업발달·진경문화 등의 등장으로 그 범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당파성론 퇴출은 간신히 이루어졌지만 전제군주론은 여전히 남아 있다. 대동·균역 연구는 본궤도에 올라와 있음에도 소작인전가설은 17-18세기 상황에 19세기 난맥상을 소급하여 비판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최근 극복되는 추세이다.

학계 학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번 교과서에 들어온 구체제론은 장단점을 살핀다는 명목으로 살아남았다. 이는 그동안 교육과정 설계에서 연구사의 변화나 학설의 채택 문제에 미처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교육공학적 입장에서 지식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학습방법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 검정 일정에 맞추어서 간신히 일정을 소화하는

종래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시적으로 교과교육에 들어가는 학설의 연구사적 의의를 분석하는 기구나 절차가 필요한 실정이다.

※ 이 논문은 2024년 11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4년 12월 0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4년 12월 17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1. 교과서

- 【2차교육과정】 한우근,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을유문화사, 1968; 문교부, 『실업계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68.
- 【3차교육과정】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문교부, 1974·1979.
- 【4차교육과정】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하)』, 문교부, 1982.
- 【5차교육과정】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하)』, 교육부, 1990.
- 【6차교육과정】 국사편찬위원회·1종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하)』, 교육부, 1996.
- 【7차교육과정】 국사편찬위원회·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인적자원부, 2002·2006.
- 【2009개정교육과정/1차검정(2010-2011)】 『중학교 역사(상·하)』, 대교/교학사/교학도서/미래엔/천재교육/지학사/비상교육, 2011-2012; 『고등학교 한 국사』, 삼화출판사/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법문사, 2011.
- 【2011개정교육과정/2차검정(2012-2013)】 『중학교 역사1-2』, 교학사/미래엔/천재교육/천재교과서/지학사/비상교육/금성출판사/두산동아/좋은책신사고, 2013; 『고등학교 한국사』, 두산동아/천재교육/교학사/미래엔/리베르스쿨/지학사/금성출판사/비상교육, 2014.
- 【2015개정교육과정/3차검정(2019)】 『중학교 역사1-2』, 금성출판사/동아출판/리베르스쿨/미래엔/비상교육/지학사/천재교육,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미래엔/금성출판사/동아출판/씨마스/해냄에듀/천재교육/지학사/비상교육/리베르스쿨, 2020.

2. 연구서 및 박사논문

- 근대사연구회, 『한국중세사회해체기의 제문제』상·하, 한울, 1987.
- 김백철, 『왕정의 조건: 담론으로 읽는 조선시대사』, 이학사, 2021.

- 김백철, 『정조의 군주상: 실상과 허상의 경계』, 이학사, 2023.
- 김백철, 『한국사강의』, 개정판, 퍼플, 2024.
- 김백철, 『세계사에서 역사교육의 방향모색: 한국사이론모델의 구축과 활용』, 그물, 2024.
-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 노관범, 『기역의 역전: 조선사상사의 새로운 이해』, 소명출판, 2016.
- 신유아, 『프레임에 갇힌 역사, 프레임을 깨는 역사』, 해안, 2021.
- 오주석 외, 『우리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1·2, 들베개, 1998.
- 오향녕, 『조선의 힘』, 역사비평사, 2016.
-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 역사비평사, 2012.
- 이태진 편, 『조선시대 정치사의 재조명』, 범조사, 1985.
- 이태진, 『조선후기의 정치와 군영제 변천』, 한국연구원, 1985.
-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중국 없는 중화』, 인하대출판부, 2009.
- 정연식, 『조선후기 ‘役總’의 운영과 양역변동』,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논문, 1993.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한국민중사연구회, 『한국민중사』1·2, 풀빛, 1986.

2. 연구논문 및 기타글

- 강만길, 「정조: 문예부흥의 영주」, 『한국의 인간상』1, 신구문화사, 1965.
- 강상규, 「근대 지식체계와 조선사 이미지」, 『동양정치사상사』 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0, 5~26쪽.
- 김성윤, 「정조년간(1776-1800)의 정국구도와 그 동향」, 부산대 사학과 석사논문, 1990.
- 김성윤, 「탕평의 원리와 탕평론」, 『부대사학』 15·16, 부산대사학회, 1992, 433~458쪽.
- 김백철, 「‘탕평’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선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상, 태학사, 2011a.
- 김백철, 「1990년대 ‘정조신드롬’의 대두와 배경」, 『국학연구』 18, 한국국학진흥원, 2011b, 187~230쪽.
- 김백철, 「조선시대 역사상과 공시성의 재검토: 14-18세기 한국사 발전모델의 모색」, 『한국사상사상학』 44, 2013, 한국사상사학회, 273~319쪽.

- 김백철, 「17-18세기 대동·균역의 위상: 조선시대 재정개혁 모델의 모색」,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2015, 41~92쪽.
- 김백철, 「오래된 미래교과서: 안학의 『조선문명사』」, 『동아시아고대』 50,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193~224쪽.
- 김백철, 「『경세유표』의 등장과 개혁안의 성격: 19세기 전통과 근대의 만남」, 『규장각』 58,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21, 127~159쪽.
- 김백철, 「조선시대 왕정상과 역사교육의 방법론 모색: ‘국민국가’·‘민국’ 개념의 재검토」, 『한국학논집』 97,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24, 175~234쪽.
- 김용섭, 「조선후기에 있어서의 신분제의 동요와 농지점유: 상주양안연구의 일단」, 『사학연구』 15, 한국사학회, 1963, 1~50쪽.
- 노관범, 「근대초기 실학의 존재론: 실학인식의 방향 전환을 위하여」, 『역사비평』 122, 역사문제연구소, 2018, 447~473쪽.
- 박평식, 「국사교육에서 조선시대사의 편제와 내용구성」, 『역사교육』 123, 역사교육연구회, 2012, 31~67쪽.
- 박평식, 「조선시대사 연구의 성과와 역사교육」, 『역사교육』 125, 역사교육연구회, 2013, 337~360쪽.
- 신유아, 「교과서 내용서술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향: 조선 전·후기 서술을 사례로」, 『역사교육』 147, 역사교육연구회, 2018, 89~120쪽.
- 신유아, 「제5차교육과정 ‘국사’의 내용편제와 서술방향: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33, 역사교육연구회, 2021, 81~113쪽.
- 신향수, 「비판적 시각으로 살펴본 실학연구」, 『내일을여는역사』 21, 민족문제연구소, 2005, 200~211쪽.
- 오항녕, 「2020년 간행(2018년교육과정)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조선사 서술검토」, 『한국사학보』 80, 고려사학회, 2020, 117~149쪽.
- 우인수, 「제7차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분석」, 『역사교육』 84, 역사교육연구회, 2002, 1~38쪽.
- 李世永, 「18,9세기 곡물시장의 형성과 유통구조의 변동」, 『韓國史論』 9, 서울대 국사학과, 1983, 185~255쪽.
- 이영호, 「‘내재적 발전론’ 역사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한국사연구회, 2011, 239~272쪽.
- 이태진, 「사회와 봉당정치」, 『한국사특강』, 서울대출판부, 1990.

- 이태진, 「사림과 유향소 복립운동(상·하)」, 『진단학보』 3435, 진단학회, 1972~1973, 상5~34쪽, 하5~33쪽.
- 이태진, 「조선후기 양반사회의 변화: 신분직역제와 향촌사회운영구조 변동을 중심으로」,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1992.
- 이홍락, 「쟁점: 내재적 발전론 비판에 대한 반비판」, 『역사비평』 41, 역사문제연구소, 1997, 229~242쪽.
- 정다함, 「“한국사”상의 조선시대상: 조선전기를 중심으로」, 『사이(SAI)』 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0, 9~53쪽.
- 정연식, 「균역법시행과 그 의미」, 『(신편)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7.
- 조석근, 「식민지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 재검토」, 『동향과전망』 38, 한국사회과학연구회, 1998, 62~95쪽.
- 조성산, 「실학개념 논쟁과 그 귀결」, 『한국사시민강좌』 48, 일조각, 2011, 20~36쪽.
- 조한경, 「역사과 집필기준과 검정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역사와교육』 16, 역사와교육학회, 2017, 105~124쪽.
- 차미희, 「7차교육과정 중학교 국사교육의 내용구성」, 『한국사학보』 19, 고려사학회, 2005, 187~214쪽.
- 차미희, 「3차교육과정기(1974-1981) 중등국사과의 독립배경과 국사교육내용의 특성」, 『한국사학보』 25, 고려사학회, 2006, 391~432쪽.
- 차미희,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 내용」, 『역사와교육』 13, 역사와교육학회, 2011, 5~38쪽.
- 차문섭, 「임란이후의 양역과 균역법의 성립(상·하)」, 『사학연구』 10·11, 한국사학회, 1961, 상115~130쪽, 하83~146쪽.
- 차문섭, 「균역법의 실시」,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6.
- 최윤오, 「조선후기 사회변동과 근대로의 이행: 내재적 발전론의 역사인식」, 『내일을여는역사』 22, 민족문제연구소, 2005, 176~191쪽.
- 최완기, 「대동법실시의 영향」, 『국사관논총』 12, 국사편찬위원회, 1990, 164~198쪽.
- 한영국, 「대동법의 실시」, 『한국사』 13, 국사편찬위원회, 1976.
- 한영국, 「대동법의 시행」, 『(신편)한국사』 30, 국사편찬위원회, 1998.

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of Historical Image of the Late Joseon Dynasty and History Education: The Shifts and Acceptance of Major Theories

Kim, Paek-chol

In academic circles, scholars have sought to overcome the bias that the dynasty was in decline after the Japanese invasions of 1592 (Imjin War). To do so, they developed an internal development theory by examining various aspects such as intellectual history (Silhak), socio-economic history (Theory of the Budding of Capitalism), political history (Factional Politics Theory, Politics of Neutrality), economic history (Land Tax System of the Great Unity, Military Service Equalization System), and cultural history (Jingyeong Culture Theory). History textbooks have gradually adopted a more positive perspective on the late Joseon period.

Reviewing the 2nd through 7th national curricula, the perspective of social transformation theory was officially introduced in 1979, incorporating the Theory of the Budding of Capitalism. With the strengthening of social transformation theory in 1990, the people-centered historical perspective and factional politics theory were adopted. By 1996, the people-centered perspective became more prominent, and in 2002, themes such as King Jeongjo's reformist policies, advance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Jingyeong Culture Theory were included, signaling a shift towards a more integrative approach. This historical view of the late Joseon period served as a primary framework in the textbook-writing process after

the restoration of the textbook screening system in the 2000s.

The compilation of textbooks has been heavily influenced not only by academic research but also by changes in political regimes, exacerbating confusion in educational settings. This is evident not only in the frequent revisions of officially certified textbooks but also in the coexistence of old and new theories within the content. This situation arises from a lack of investment in analyzing historiographical research during the curriculum design process, with a primary focus on determining the scope of knowledge and methods of instruction from an educational engineering perspective. However, without in-depth discussions on the actual content to be included,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desired outcomes in history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ngoing mechanism or procedure for analyzing the theories incorporated into textbook education.

keywords :

Historical Image of the Joseon Dynasty, History Education, Theory of the Budding of Capitalism, Factional Politics Theory, Politics of Neutrality, Land Tax System of the Great Unity, Military Service Equalization System